



더 불 어

(11·12월)

발행처-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 발행인-최상철 | 기획-홍보팀 | 홈페이지-www.region.go.kr | 통권5호

정책 핫이슈

“더 큰 대한민국, <초광역개발권>으로 앞당긴다” - 2009년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 정책보고 요약 -

Contents

- 정책 핫이슈 1
"더 큰 대한민국, <초광역개발권>으로 앞당긴다"
- 정책 포커스 2
도시경쟁력 키워 국가 및 지역발전 선도한다
"광역축 사무국 현실단계 중간점검"
- 위원장 메시지 3
"초광역개발은 개방-연계-화합의 상징입니다"
- 지역 안테나 4
충남도, 관광객 발길 잡기 76억 투자
서산시, 대산항 북중국 개척 나선다
제주 예매단지,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경북, 도내 공공건축물 내년부터 고품격화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 내년 말 착공
광주, 타이어 기술력 광주·전남이 최고
화천, '2011 아시아 조정선수권' 유치
경남, 쌀(고성)·사과(거창)·단감(사천) '세계로'
- 중앙 풍향계 6
공공기관 통합 추진 진도 및 효율화 현황
전국 어촌 따라 '해안선 자연거코스' 개발
대도시 산업단지 지정 쉬워진다
하반기 지자체 건의 중앙규제, 부처와 일괄협의 추진
군(郡)단위 학교 통폐합·재배치 추진
전기요금도 휴대폰처럼 골라 쓴다
시·군·구 복지행정, 단순화하고 효율성 높인다
- 글로벌 인사이드 8
해외정책 사례연구 - 유럽의 초광역개발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정책보고 회의 (2009.12.2)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궤)가 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에 이어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지역궤는 지난 12월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09년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와 함께 ▶4대벨트 기본구상 ▶5대 추진전략 등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이명박 정부가 동북아 경제권과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광역·기초·초광역의 3차원적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틀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초광역개발권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광역경제권간 상생발전을 위해, 대외개방형 新성장축을 구축하는 미래형 국토전략이다. 이날 지역궤가 총괄 보고한 초광역 '4대벨트 기본구상'은 해안권별 특성과 DMZ 생태자원을 살리는 국토잠재력의 극대화가 목적이다. 또 '5대 추진전략'은 초광역·초국경적 교통물류·첨단산업·생태자원의 활용을 위한 연계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 4대벨트 구상 : ①남해안 선벨트-물류·관광거점·동서화합 ②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에너지산업·국제관광
③서해안 신산업-첨단산업·BIZ ④남북교류 접경벨트-생태관광·남북교류
- * 5대 추진전략 : ①초국경적 경제협력강화 ②초국경적·초광역적 인프라 구축 ③국가 新성장동력 육성
④초광역 공유자원 활용 ⑤남북교류대비 국토기반 조성

국토해양부는 상세보고에서 동·서·남해안의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개발사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개정과 민자유치를 위한 제도정비에 착수키로 했다. 행안부는 에코벨트 상세보고에서 DMZ 접경지를 생태관광·국제평화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개정한다. 또 기재부는 남해안 선벨트의 자연경관·문화자원을 활용한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화를 위해, 투자여건 개선·우수한 경관창출·관광콘텐츠 확충 등 제도 개선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내륙벨트는 4대벨트와 별도로 내년 상반기 지정된다. 지역궤는 지난 8월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지역이 건의한 5개 제안의 적합여부를 검토, 내륙벨트 권역을 지정하고 기본구상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발전특별법' (가칭)으로 개정해 내륙벨트의 향후 실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3차원 지역발전 정책의 한 축인 초광역개발권(新성장축)이 광역경제권(일자리), 기초생활권(삶의 질)과 함께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에도 본격적인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면 계속>

다음은 12월2일 열린 지역쫑 보고 당시 대통령 말씀과 참석자들의 주요발언 요지다.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도시로 나누기 보다는 초광역권으로 묶어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역간 소통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다. 내륙과 해안을 연계해 함께 발전하도록 한다면, 20년쯤 뒤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균형있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 ·내륙벨트 설정에 대한 정책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준 것은 내륙권 지자체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 내륙벨트 기본구상도 하루빨리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최용호 교수(경북대 명예교수)

· ·남해안 선벨트 가운데 남중권은 동서통합의 상징지역이지만, 역대정부의 정치적 구호에 그쳐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었다. 이번 기회에 남중권 계획이 구체화되고, 이를 통한 파급효과도 영호남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이정록 지역쫑 위원(전남대 교수)

· ·동해안 초광역개발권은 산 · 들 · 바다를 분리할 수 없는 ‘동백회랑’ 지역으로, 백두대간까지 포함한 발전계획이 나와야 한다. 특히 민간투자가 어려운 지역인 만큼 UNDP의 두만강 델타 프로젝트와 같은 공공투자가 필요하다. 황원규 지역쫑 위원(원주대 교수)

· ·남해안 선벨트 규제합리화 방안에 공감한다. 기본구상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아울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도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통해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 박인철 청장(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미국 타임지는 아시아의 가장 가볼만한 관광지로 DMZ접경지역을 추천하고 있다.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중첩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때 반영돼야 할 것이다. 또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류화선 지역쫑 위원(파주시장)

정책 포커스

지역쫑, 도시경쟁력 키워 국가 및 지역발전 선도한다

지역쫑은 지난 10월 29일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위촉위원 전체회의를 개최, 도시정책 현안, 창조지역 육성방안, 그리고 국가도시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도시 · 도시재생 등 도시정책 현안과 문화 · 역사자원 등 지역고유의 소프트파워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지역발전전략인 ‘창조지역’ 육성방안도 논의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도시정책을 수립하여, 광역경제권 등 지역발전의 핵심거점인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연내에 매듭짓고, 주요 이전기관은 연내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를 착수기로 했으며, 도시재생 및 노후산업단지 재생은 구도심 기능 회복과 도시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법령(절차간소화, 재원)의 제정 ·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KTX역세권 특성화발전은 접근성 강화, 역세권 도시재생, 지역별 특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지역쫑은 또 문화 · 역사 · 교육 · 환경 등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자율적 · 내생적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창조지역 기본구상을 연내에 마련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 학계

-위촉위원 전체회의, 혁신도시 · 도시재생 등 도시정책 논의-

등과 함께 종합적인 국가도시정책을 2010년 상반기 중 수립해,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가도시정책은 물리적 시책위주의 정책을 공간 · 산업 · 교육 · 문화 · 환경 등을 아우르는 선진국형 도시발전전략으로 바뀌고, 개별도시에 국한된 정책을 광역경제권내 대·중·소도시와 연계하는 도시권 발전 및 성장관리 전략으로 재편될 방침이다.



▲10월 29일 지역위 위촉위원 전체회의

“초광역개발은 개방-연계-화합의 상징입니다”

- 12.2 초광역 기본구상 발표의 의미 -

세계가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는 초광역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골든바나나·블루바나나·외레순 등 이미 초광역개발이 한창입니다. 골든바나나(Golden Banana) 지역은 스페인 남부~이탈리아 북부의 지중해 연안으로, 유럽의 전자·항공·첨단산업 메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영국 동남부~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이 참여하는 블루바나나(Blue Banana)와 덴마크~스웨덴의 외레순 지역도 초광역개발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곳입니다.

동북아 초광역개발 시대도 도래하고 있습니다. 중국~대만간 양안개발, 광둥~홍콩~마카오의 주장델타 개발이 그렇습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초광역 개발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초광역개발을 재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광역개발은 광역경제권을 뛰어넘는 글로벌 성장동력-연계협력-지역화합을 선도해 동서 및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과 통일시대를 여는 개방형 국토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광역개발을 위한 우리의 5대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동북아 경제협력입니다. 러시아·일본과의 에너지·물류협력(환동해권), 상하이·베이징과의 네트워크(환황해권), 그리고 남해안·서일본간 협력지대(환태평양)를 만듭니다. 둘째, 초광역 인프라입니다. □차형 고속화철도망(3개해안·동서축), 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CR·TSR), 거점공항·항만(인천공항·부산항), 그리고 해저터널(한·중·일)과 파이프라인(시베리아) 등도 장기과제에 넣었습니다.

셋째, 신성장동력입니다. 권역별 선도산업(조선·철강·자동차·IT등), 초일류 산업벨트

(신재생에너지·신소재 등), 글로벌 관광벨트(수려한 도서·해안), 그리고 동북아 크루즈항로(아라뱃길~제주·부산·속초 등 해양레포츠 루트)도 생깁니다. 넷째, 지역 공유자원입니다. 백두대간·하천 등을 활용한 생태·휴양네트워크, 지역 고유의 문화·역사자원을 통한 창조지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통일시대 국토기반 조성입니다. 산업·관광·물류분야의 남북교류 협력지대와 교통망을 복원하고, DMZ 생태보전으로 녹색관광기반을 키웁니다.

초광역개발의 성공은 지역·국가간 연계·협력 체제구축에 달려있습니다. 지역쫓는 이를 위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친환경·규제완화·투자유치 등을 앞당기는 한편, ‘2010 동북아 초광역 국제회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개 해안벨트·남북접경벨트 외 지방정부가 제안한 다수의 내륙벨트를 검토중이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륙벨트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것입니다. 광역경제권간 협력을 이끌고, 동북아와 세계로 열린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최일선에 바로 초광역개발권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상철



정책 포커스

광역쫓 사무국 현지실태 중간점검

지역쫓은 지난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광역경제권별로 사무국에 대하여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실태 점검은 광역위원회 사무국 구성·운영 실태와 각 권역별 연계·협력 사업 발굴정도 및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사항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실태점검 결과, ▶광역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평가에서 광역위 역할 ▶광역위 위상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쫓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사무국 구성은 관인제작, 시도 직원 파견, 연구원 채용, 자문단 구성 등 매듭을 지었으나, 지역쫓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한 광역권역은 연내 개최를 추진하도록 독려했다. 또 사무국 운영은 사무실 집기류 비치, 필요예산 확보 등 운영에

-광역위 출범 100일 맞아 운영상 애로사항 현장 청취-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잔여예산 조속배정, 광역위 홈페이지 구축, 경제동향 및 통계조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쫓과 협의를 통한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계·협력 사업발굴은 광역위가 주관이 되어 광역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주문하고,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출범한 호남권은 광역유관기관 간담회 때 지역쫓 국·과장이 참석해 지역쫓 정책 및 광역위 기능과 역할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지역쫓은 이번 실태점검을 계기로, 향후에도 광역위와 협의해 현장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현장중심의 지역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충청권 충남도, 관광객 발길 잡기 76억 투자

충남도가 지난 11월 초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사업에 76억원을 투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도는 지난 7월 최종 확정된 충청권 3개 시·도 공동사업 9개와 함께 지난 9월 확정된 30개 자체사업 가운데 관광객 유치 가능성이 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15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사업(9건)과 충남도 자체사업(15건) 등 24건의 프로그램 가운데 13개 프로그램은 충남도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추진기획단 주관으로 시행되며, 나머지 11개 사업은 도내 16개 시·군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지난 10월 29일 사업별로 공모신청을 받아 유치를 원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주관 시·군을 최종 확정했다. 충남도와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15개 사업은 당진 왜목마을 해맞이 축제장에서 개최되는 '충남방문의 해 선포식' 과 태안 기름유출사고를 다크 투어리즘으로 관광 상품화한 '태안환경대축제', 한국관광총회 행사와 연계한 관광홍보사업 등이다.



▲왜목마을 해돋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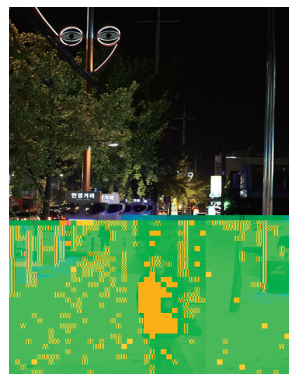
서산시, 대산항 북중국 개척 나선다

서산시가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는 대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남중국으로 편중돼 있던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북중국으로 확대, 대중국 전진기지항으로 외연을 넓힌다. 지난 9월 '대산~홍콩~산둥우~샤먼~취안저우~푸칭'의 컨테이너 정기항로가 주 5항차로 늘었지만, 모두 남중국 노선. 시는 대산항의 항만물동량 유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북중국 정기항로의 개설도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대산항과 청도항, 청진항, 대련항 등 북중국까지 컨테이너선 정기항로를 개설해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서산 대산항의 물동량은 1만 5,000TEU(1TEU=컨테이너 1개)로, 연말까지 가면 2만 7,000~8,000TEU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늘어나는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감안, 컨테이너 화물을 오는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0만 TEU까지 늘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1단계 2차 사업이 한창인 서산 대산항은 오는 2010년까지 모두 1,283억원이 투입돼 북방과제(210m)와 호안(145m), 잡화부두 2만급 및 3만급 각 1선석(450m), 3만급 자동차 전문부두 1선석(240m, 민자시행), 2000TEU급 컨테이너부두 1선석(250m)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제주권 예레단지,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제주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관광분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승인을 받았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5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15년간 100% 면제된다. 또한 진입도로 2개 노선 총 연장 1.23km의 확포장 공사비 38억원도 국비로 지원된다. 전국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은 현재까지 총 48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1억달러 이상이 투자되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프로젝트로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처음이다. 예레단지는 지난 1월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받아 현재 건축설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내년 초에 1단계 건축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대경권 경북, 도내 공공건축물 내년부터 고품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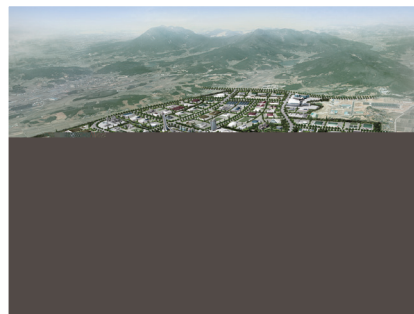


▲대구 안경산업특구 안경거리

경북도가 내년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특색 있는 명품도시 조성에 나선다. 친환경적인 디자인, 녹색커뮤니티를 강조한 격조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경북도가 추진할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수용한 친환경 미래도시 디자인이다. 둘째,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역사·문화적 가치존중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경관계획·지역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편리한 공간활용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건축물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친근한 공간조성의 구체적 기준과 안내가 쉽고 간편한 설명과 함께 제시된다. 경북도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건축물의 배치·형태와 색채·친환경계획·교통처리·경관 등을 고려, 우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공공건축물에 먼저 추진한 뒤 민간건축물로 점차적으로 확산해 조기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호남권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 내년 말 착공

아시아 식품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전북도는 지난 11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시 왕궁면 일대 396만7,000㎡(120만평)에 오는 2015년까지 8,10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식품기업 145개와 민간연구소 10개를 유치해 조성한다. 이를 위해 농림식품부는 올해 안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한다. 농림식품부는 또 5,800억원을 투입해 2012년까지 식품전문국가산업단지(239만㎡)를 조성하고, 2015년까지 기업입주와 R&D시설·임대형공장·파일럿 플랜트(시험공장) 등의 지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와 익산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주거 및 상업용지(157만㎡, 2,300억원)를 조성할 예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면, 7조4,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1,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식품클러스터 조감도

광주, 타이어 기술력 광주·전남이 최고

타이어 제조 등 화학분야에서 광주·전남의 기술력이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1월 선정한 전국 58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자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10회, 곡성공장은 11회 연속 선정되면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적극적인 품질경영으로 최첨단 타이어 기술의 결정체인 포물러3 레이싱 타이어와 연비절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타이어를 생산해 세계수준의 타이어 생산기지임을 입증했다. 이는 금호타이어가 고객만족의 경영원칙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펼쳐온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 금호폴리캠은 10회, 금호피엔피화학은 9회, 금호미쓰이화학은 8회 연속으로 뽑히는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의 품질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지난 97년부터 시작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은 품질시스템, 전략 및 관리시스템, 기업문화 및 인재육성 등 13개 분야에서 74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이뤄졌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품질향상원가절감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품질개선 등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품질경영을 정착시킨 기업들을 선정해 왔다.

강원권 화천, '2011 아시아 조정선수권' 유치

화천군이 2011년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 화천군은 지난 11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조정연맹(ARF) 총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후 만장일치로 화천 개최를 결정했다. 한국은 2007년 충북 충주시가 이 대회를 개최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대회를 유치했다. 화천군은 2006년 제7회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화천호의 뛰어난 경기장 여건, 개최의지 등을 강력히 전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화천군은 앞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회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조정연맹 회의에 참석했던 북한 염경호 선수단장은 화천대회 참가와 스포츠 및 문화교류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는 2011년 10~11월께 아시아 29개국 60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선보인다.

동남권 경남, 쌀(고성)·사과(거창)·단감(사천) '세계로'



▲경남 명품과일 브랜드 이도로 출시식

경남 고성 환경쌀, 거창 명품사과, 사천 단감이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고성 쌀은 지난 10월부터 LA지역, 거창 사과는 지난 11월 대만으로 수출된 데 이어, 지난해부터 동남아로 수출되던 사천 단감은 지난 10월 전년대비 30%이상 수출이 늘었다. 고성 쌀은 1차분 20t이 지난 11월 말 마산항을 거쳐 수출길에 올랐고, 내년까지 총 200t을 수출할 계획이다. 거창 사과는 지난 9월 조생종인 홍로사과 60t을 수출해 1억4,45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연말까지 240t이 대만으로 수출된다. 사천 단감은 지난해 1,202t 110만 달러에서 올해는 1,400t을 수출, 지난해 보다 30%이상 늘어, 올해 목표인 180만 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 추진 진도 및 효율화 현황

기재부는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11월 현재까지 30개 기관을 13개 기관으로 통합을 완료하고, 나머지 6개 기관의 통합도 매듭지를 방침이다. 13개 통합기관 정원은 통합 전과 비교해 평균 20.2% 수준으로 감축됐다. 유사·중복기능의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가 목적인 기관은 감축률이 높은 반면, 기관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목적의 기관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신규기능이 추가·확대된 기관은 상대적으로 감축률이 낮았다.

〈공공기관 통합 추진진도 및 효율화 현황〉

구분	부처	통폐합 기관명	통합前 기관명	통합일자	통합前 정원	통합後 정원	감축 정원	감축 비율(%)
안 료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트랙 + 코레일엔지니어링 + 코레일전기	'09.1.29	64	47	△17	△26.6
			코레일개발(주) + 코레일네트웍스(주)	'09.1.29	1,361	1,188	△173	△12.7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상품진흥원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09.4.8	142	134	△8	△5.6
	문화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게임산업진흥원 (+ 소프트웨어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09.5.1	220	191	△29	△13.2
	지경부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지원기술기획평가원 (+ 에너지관리공단 + 한전 + 생산기술연구원)	'09.5.4	78	78	0	0
		산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소 + 부품소재산업진흥원 + 산업기술재단 + 산업기술평가원	09.5.4	245	215	△30	△12.2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R&D) (+디지털진흥원+생산기술연구원)		220	192	△28	△12.7
	행안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09.5.22	324	276	△48	△14.8
	교과부	한국연구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한국과학재단 + 한국학술진흥재단	'09.6.26	319	275	△44	△13.8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인터넷진흥원 + 정보보호진흥원	'09.7.23	279	251	△28	△10.0
	문화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09.7.23	95	80	△15	△15.8
	지경부	정부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 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09.8.24	302	261	△41	△13.6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공사	'09.10.1	7,367	5,600	△1,767	△24.0
	소계(A)	13개	30개		11,016	8,788	△2,228	△20.2
추 진 중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 환경관리공단	-	2,187			
	복지부	한국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원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165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재의료원	-	5,600			
	소계(B)	3개	6개		7,952			
합계(A+B)		16개	36개		18,968			

농림수산식품부 전국 어촌 따라 '해안선 자전거코스' 개발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어촌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독특한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자전거 타기의 대중화를 위해 해안선을 잇는 코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어촌어항협회 주관으로 탐사팀을 구성, 지난 10월 14일부터 전국 해안선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탐사팀은 자전거로 달리기 좋은 해안길을 따라 어촌체험마을, 아름다운 어촌 100선, 주요 어항 및 어촌관광단지 등을 직접 방문해 어촌과 어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정리하고 있다. 개발되는 코스는 해양관광 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com)' 사이트와 자전거 전문 포털사이트(bike.donga.com)를 통해 소개되고, 코스 개발이 완료되는 12월에는 화보집으로 발간하여 시중 보급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탐사팀이 개발한 해안선 코스를 바탕으로 향후 수산업과 연계된 테마별 코스를 개발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료관리체계도 구축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대도시 산업단지 지정 쉬워진다

지난 11월부터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도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공기업과 특별시·광역시·도의 도시개발공사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령은 민간기업 중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공급시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업종의 배치 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광역시, 대도시에서도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지자체가 정책목적상 유치한 기업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산단에 입주할 기업을 미리 유치, 선정할 이후 지정·개발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다로 간 자전거도로로 탐사대

행정안전부 하반기 지자체 건의 중앙규제, 부처와 일괄협의 추진

행안부는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자치단체와 행안부가 공동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566건에 대해 부처와 일괄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 발굴해 일괄협의 하게 될 규제개혁 과제들은 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창업에 애로를 주는 사항들로, 지자체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공무원·전문가들의 현장면담 및 사전검토회 등을 통해 선정된 것들이다. 행안부는 지방건의 규제개혁과제가 조기에 개선되어 서민생활 불편을 해소·투자활성화 촉진·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1월 중으로 부처협의를 마무리하고 수용과제는 조기 입법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일괄협의 대상 주요 지역현안 〉

서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완화	중기청
부산	서부산투자촉진을 위한 낙동강하류문화재구역 추가해제	문화재청
인천	선수촌 등 대회관련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가 상한제 배제	국토해양부
대전	대덕특구지역 입주 제한업종 규제 완화	지식경제부
경기	성남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국방부
강원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품종 완화	농식품부
충북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완화 시행시기 조정	환경부
충남	인삼류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및 대상품목 제약요건 완화	농식품부
전북	새만금 방수제공사 지방건설업체 참여 확대	기재부, 농림부
전남	도서개발촉진 대상지역 확대	행안부
경북	낙동강 수계완충처리시설 설치 완화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군(郡)단위 학교
통폐합·재배치 추진

교과부는 전국 9개 군(郡), 38개 유치원·초중고교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郡) 지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시범사업’은 학생수가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郡)지역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학교를 통폐합·재배치하는 사업이다. 교과부는 학교 통폐합·신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향후 2년간 6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유치원은 통학 지원비 등으로 30억원씩을 지원받게 되고, 통폐합된 학교는 농산어촌 전원 학교로 지정돼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식경제부 전기요금도 휴대폰처럼 골라 쓴다

전기요금 체계가 이동통신요금처럼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체계를 소비자의 요금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요금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용과 일반, 산업용 모두 이동통신 요금처럼 다양한 체계를 마련해 각 가정이나 사업장의 사용패턴에 따라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사용량이 적은 가정에서는 낮은 기본요금을 선택하고 사용량별 요금이 높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사용량이 많을 때에는 기본요금이 높고 사용량별 요금이 적은 요금 체계가 유리하다. 현재 주택용 요금은 저압과 고압 등 두 가지 체계가 존재하지만 이는 설치 전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단일 요금체계다. 산업용과 일반용은 고압전력일 경우 기본요금과 전력량별 요금이 달리 적용되는 선택안이 존재하지만 업종별 사용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다는 평가가 많았다.

보건복지가족부 시·군·구 복지행정, 단순화하고 효율성 높인다

복지부는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대책은 시군구 사회 복지업무 지원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본격 가동에 맞춰 정보시스템 사용의 효과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마련한 것으로 △급여관리 업무절차 간소화 △유사업무 중복 방지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향후 지자체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조직·인력 구조와 사회 복지통합관리망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정책 사례연구 - 유럽의 초광역개발

유럽의 초광역개발 추진동향과 시사점

-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는 초광역 개발은 대세-
- 글로벌경쟁력을 키울 초광역개발권 육성시급-

유럽에는 국경을 초월한 정주지와 산업집적지가 발전하고 있다. 일찍이 그리스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도시계획가인 독시아디스(C.A Doxiadis)가 예견했던 에페로폴리스가 현실이 되었으며 이제 유럽 전체가 세계도시를 향해 발전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도 요즘 지역협력(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을 목표로, 초광역 개발을 적극 펼치고 있다. EU의 초광역적 지역협력은 접경지역(cross-border), 초국가적(transnational), 지역 간(interregional) 형태로 추진되며, 예산은 유럽지역개발기금에서 나온다. 초광역 지역협력은 서로 다른 국가의 기관들이 도시·농촌·연안역 개발, 경제관계개선, 중소기업 설립 등 공동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며 주로 연 구개발, 지식기반사회, 위험방지, 수자원통합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 접경지역협력 대상 ▲발틱해 초국가적 지역협력

먼저, **접경지역협력(cross-border)**의 대상은 육상 또는 해상경계선 150km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52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초국가적 협력(transnational)** 대상은 EU집행위원회가 지정한 13개 지역이며, 발틱해와 지중해의 초국가적 협력이 대표적이다. 끝으로 **지역 간 협력(interregional)** 프로그램은 EU 회원국 전 지역과 노르웨이와 스위스 지역이 수혜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은 우수사례 등 정책경험의 교류에 초점을 맞춘다. 2009년 현재 41개 프로젝트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혁신과 지식경제’, ‘환경과 위험방지’ 등이 주요 목표다.

우리나라도 지난 12월 2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초광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환동해, 환황해, 환태평양권 등 동북아 초국경 연계 인프라 및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대내적으로는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을 통해 개방·연계·화합의 신성장지대를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초광역 지역협력의 거버넌스 장치인 유럽지역협력체(EGTC)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실제로 작동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하면서 초광역사업을 광특회계에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다. EU, NAFTA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경제권에 걸맞는 초광역 개발전략을 구체화하여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위원회 상임전문위원 한경원



▲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건물 전경



▲ EU 지역위원회 임원과 면담하는 지역위 방문단